

# 현대 위험사회에서의 위험연구

노진철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서구에서 위험연구는 수용가능한 위험 수준의 측정, 평가를 놓고 기본적인 지향과 고찰방식에서 3가지 경향으로 나뉜다. 형식적-규범적 입장을 취하는 위험객관주의와 심리적-인지적 입장을 가진 위험주관주의, 그리고 문화적-사회학적 접근을 보여주는 위험구성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연구는 국가의 통제를 정당화하고 위기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학문으로 진략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런 맥락에서 Beck에 의해 촉발된 위험사회 논의는 연구중심을 수용가능한 위험 범위에서 위험의 사회적 구성조건으로 이행시켰다. 이는 다시 Perrow, Wildavsky, Giddens, Luhmann 등에 의해 결정자와 당사자 간의 위험갈등을 포괄하는 사회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연구가 우리 사회의 위험연구에서 가지는 함의는 적지 않다.

**주제어:** 국가위기관리, 위험사회, 위험갈등

## I. 머리말

우리 사회가 위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가 그 계기였다. 그러나 위험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부안 핵폐기장 거부사태, 해화전화국 전산망장애 등을 통해 과학 및 기술발전의 부정적인 결과와 위험에 대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부터이다. 이것은 서구에서 1960년대 초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설비공사가 확산되면서 위험연구가 처음 시작되었던 것이나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 지구적인 생태학적 위협, 핵위협, 새로운 차원의 첨단 기술의 도입과 그 위험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본격적으로 일어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폭발을 계기로 서구에서 현대의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학계의 비판적 성찰이 일어났던 것에 비하면 한참 뒤늦은 것이다. 체르노빌

원전폭발로 인하여 세계가 지구적 몰락에 대한 공포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으로 위기의 담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해 강 건너 불 보듯 냉담하였다.<sup>1)</sup>

그러나 우리의 삶이 잇달아 터지는 대형 재난사고로 인해 재앙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위험소통이 증가하고 미래를 과거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비록 서구에 비해 뒤늦었지만 단기간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정현안정책조정위원회 등 위기관리 의사결정기구가 설치되는 등 예방적 차원에서의 위기관리가 행해지고 있다.<sup>2)</sup> 또한 이러한 국가 개입주의의 분위기에서 국립방재연구소,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지역방재연구소 등이 설립되어 위험연구가 제도화되는가 하면, 위험소통에 대한 반향으로 여러 관련학회에서 학회를 열고 위험연구를 하나의 학문공동체로서 정립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학문적으로 위험연구를 체계화하기 위한 작업은 우선 1960년대 초 서구에서 상업용 원자로의 도입에 대한 반응으로 확률론에 따른 위험분석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세계적으로 원전의 설비투자가 확산되면서, 연구영역도

- 1) 서구에서는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반전반핵운동과 연계하여 원전의 운영과 신규건설을 거부하는 환경운동을 전개하였고, 안전전문가들이 원전의 재난가능성과 경제적 환경적 차원의 피해 비가역성을 제기했다. 그 결과 선진 각국의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신규 원전건설을 백지화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환경운동이 부재한 속에서 안전전문가들이 원전을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선전함으로써 지자체들은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원전의 유치경쟁을 벌였다.
- 2) 과거 재난관리는 예방보다는 긴급구조구급 등 재난수습과 복구에 맞춰져 있었다. 1993년 구포역 열차전복사고 후 국무총리훈령 제275호 '사고로 인한 재해수습에 관한 훈령'과 이를 보완한 제280호 '재난예방 및 수습에 관한 훈령'이 발표되었고, 이어 1995년 성수대교 붕괴 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삼풍백화점 붕괴 후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었다.

공공성을 도외시한 채 산업과 규제행정에만 천착했던 전통적인 안전연구로부터 벗어나 현대기술의 수용을 진지하게 거부하는 새로운 관념과 위험연구로서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과거 시설기술의 발전에 따른 안전을 다루던 보조학문에 불과했던 '위험성 평가(Risk-Assessment)'가 포괄적인 연구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즉 '위험성 평가'라는 표제어 아래 특정한 위해의 위험에 대한 진단 혹은 측정; 당사자 집단에 의한 위험 및 피해가능성의 평가; 조직설계에 의한 위기관리; 안전규정의 확정, 감시, 훈련; 위험영향분석과 같은 위험의 양적 비교; 사고시리즈와 안전/위험 유형학의 정의를 통한 사건구조 분석, 오류계통수분석 등 현대 첨단기술의 안전/위험을 다루는 상이한 연구들이 행해졌다. 그리고 위험연구에는 첨단기술의 도입에 따른 수용과 갈등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추가되었다.

Beck(1986)의 '위험사회'의 출간 이후 현대의 과학 기술 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가시화되면서, 오래간만에 사회과학이 사회적 각광을 받는 하나의 거대사업으로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험사회, 위험규제, 위험갈등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이 최근 10여 년 동안에 다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위험연구가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심을 끄는 연구분과로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한편으로 현대 첨단기술의 위해가 처음에 가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쉽게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다른 한편으로 첨단기술의 도입이 격렬한 사회적 갈등과 연결되어 있음이 밝혀진다. 특히 위험을 둘러싼 갈등은 기술적 문제나 행정적 문제보다 사회적 문제가 위험연구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킨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미래가 현재에서 내린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낙관적으로도 비판적으로도 전망할 수 없고, 하물며 조정할 수도 없다는 사실 앞에 불안해한다. 학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위험을 전통적 위험과 구분하고(Jonas, 1984; Lau, 1989), 전자에서 과학과 첨단기술에 의한 새로운 문명적 위험인 재난의 잠재성, 결과의 비가역성, 피해의 지구성 등이 극대화되는 것을 본다. 일부 학자들은 이항 대립의 구도에 따라 서구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단순한 위험사회'라면, 우리 사회는 전통적 위험과 새로운 위험이 공존하는 '이중위험사회'(김대환, 1998: 28), '복합위험사

회'(장경섭, 1998), '총체적 위험사회'(성경룡, 1998), '후진적 위험사회'(이동훈, 1999; 정태석, 2003)라는 주장을 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후진성'이라는 서구중심적 가치편향의 전제 위에서 파악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나아가 실제로는 우리 사회가 대부분의 사고유형에 걸쳐 서구의 어느 사회보다도 사고빈도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사회가 서구와는 달리 각종 위험으로 넘쳐나는 것처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그리고 위험소통에서 새로움은 이들 주장의 기반이 되는, 과거/현재를 가르는 위험 유형의 이항 대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이 위험/위해의 논쟁에 참여한다는 데 있다. 오늘날에는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군사적, 기술적으로 생성된 위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 대한 인지, 평가 및 규제도 점점 더 과학을 매개로 하여 조정되고 있다. 사회발전의 위험/위해에 대한 어떠한 논쟁도 과학을 배제한 채 이루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 위험의 존재와 규모도 과학의 도움으로 비로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과학은 위험/위해 발생의 본질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위험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징후적 현상이어서 과학적 지식은 정책결정의 합리성의 원천으로서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과학적 지식을 무시하거나 과학적 지식에 모순되는 결정은 정당성의 상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가 점점 더 과학에 의존적으로 되면서 국가가 자연재해를 포함하여 사회의 질서유지에 혼란을 초래하는 모든 위해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위기관리에 나섬에 따라 우리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는 기존의 위험연구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위험연구를 개별 학문적 이해관심으로부터 분리시켜 체계화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험연구가 상이한 학문 영역에서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위험연구의 제도화와 학문으로서의 정체성 간에 패러독스가 현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양한 학문영역이 상이한 학문적 이해관심에서 위험 논쟁에 참여함에 따라 야기된 이론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위험 개념을 내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던 시도는 오히려 각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위험 개념이 공통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해야 했다. 대체로 초

기의 위험연구는 위험을 국가의 행정관리나 예산관리의 개선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우연적인 성격의 장애로 파악하고 수용가능한 위험 수준의 측정, 평가를 놓고 기본적인 지향과 고찰방식에서 3가지 경향으로 나뉘어졌다. 형식적-규범적 입장을 취하는 위험객관주의와 심리학적-인지적 입장을 가진 위험주관주의, 그리고 문화적-사회학적 접근방법을 보여주는 위험구성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수용가능한 위험 수준에 지향된 위험연구는 국가의 행정적 개입과 규제를 통한 위기관리에 절대적 타당성을 부여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동시에 국가의 통제 강화를 정당화하고 위기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학문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이런 맥락에서 Beck에 의해 촉발된 위험사회학은 연구중심을 수용가능한 위험 수준의 문제에서 위험의 사회적 구성조건의 문제로 전환시켰다. 국가의 위기관리가 시장의 경제적 재생산을 원만히 관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이를 위협하는 새로운 긴장과 모순을 만들어내는 이중성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Perrow, Douglas & Wildavsky, Giddens, Luhmann 등은 이를 사회이론으로 발전시킨다. 이러한 서구 위험연구의 역사적 이행과정은 우리의 위험연구에서 가지는 함의가 적지 않다.

## II. 위험객관주의(Risk-Objectivism)의 가능성과 한계

위험연구의 초기에는 경기침체, 산업재해, 교통사고, 선박사고, 비행기사고, 유조선침몰, 원전사고 등 생태학적-기술적 위험에 대한 형식적-규범적 관점의 접근방법이 지배적인 경향이었다. 이 연구 경향의 목적은 위험사건을 측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위험척도를 개발하는데 있었다. 위험연구자들은 이 위험척도의 도움을 받아 상이한 위험사건들을 사건의 개연성 정도와 진행결과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그들은 유형 분류를 통해 상이한 위험들의 수용가능한 범위(acceptable risk criteria)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했다. 이 위험의 유형화는 한편으로 보험학에서 빌려온 위험공식을 활용하여 위험을 산술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 의사

결정 이론의 합리적인 결정 모델을 활용하기도 했다. 전자는 위험을 사고가 일어날 확률과 피해 규모의 기대치를 곱한 값( $R=P \times S$ )으로 산정했고, 후자는 위험척도에 의거하여 효용 측면과 피해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다시 말해 위험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한 결정이론의 '피해기대'에 따라 정의가 내려졌으며, 이 피해기대는 형식적인 위험척도로서 일반화되었다. 이처럼 계산된 위험이 이른바 '객관적 위험'이며, 이러한 형식적-규범적 고찰방식이 위험객관주의이다(Klebensberg, 1977; Fritzsche, 1986).

위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알려지고 피해가 양적 척도에 따라 명백하게 규정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어떤 위해 사건이든 위험객관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확률의 산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단순통계, 총확률에 대한 개별확률의 산정 이외에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된 가설적 확률도 동원되었다. 대표적인 통계 처리방법은 예증적 사례로부터 전체에 대한 결론을 짓는 방법이다. 이것은 테스트를 통해 기술적인 구성요소의 손실 빈도수로부터 체계의 장애확률 일반을 추론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인적 피해가 따르는 교통사고의 빈도수에서 사망사고의 확률을 도출하거나 지난해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에서 매년도 재해도수율을 산정하는 식이다. 이러한 방법은 관찰된 사례들이 속해있는 전체가 동질적이라는 동질성 모델을 전제로 했다.

이무튼 수학적 확률이론은 이 모델이 적합하다는 전제에서 임의 추출시험으로부터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방법을 취한다. 혼히는 임의 추출시험이 없거나 너무 작더라도 '가설적' 확률은 가정된다. 예컨대 '라스무센 리포트(Rasmussen Report)'에서는 원자로의 핵융합이 고압과열증기의 폭발로 갈 사고확률을 0.1로 가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증기폭발이 냉각수 저장탱크를 비롯한 안전장치를 날려버릴 확률도 마찬가지로 0.1로 가정한다. 그로써 증기폭발에 의한 재난사고의 확률은 0.01의 값으로 산정된다. 이 수치가 핵융합사고의 확률  $10^{-6}$ 과 곱해지면 사고확률은 극히 낮아진다. 이러한 자의적 처리절차는 원전의 사고위험에 대한 현실 사회의 해석과의 괴리로 인하여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위험 규정의 두 번째 구성요소는 피해의 규모이다. 위

험척도의 적용 과정에서 수량화할 수 없는 피해 측면의 문제가 흔히 기술적 영역을 넘어서 제기되었다. 확률 개념과 마찬가지로 학술적 논문에서는 ‘효용이론’으로 다루어졌던 전통적인 과학이론의 발전이 있었다. 위험객관주의는 단순한 개별적인 우선순위의 구조를 넘어서 수익과 손실의 상이한 측면들을 투사할 수 있는 양적 척도를 발달시켰다. 피해 기대의 양적인 위험척도는 안전기술의 영역을 넘어서 경제이론의 결정모델, 게임이론, 실험심리학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특히 ‘객관적’ 위험으로서 대표되었던 원전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여론화되었다. 만일 학자들이 이러한 위험척도를 결정이론의 모델과 연결시킨다면, 위험은 효용과 피해의 생성 기대치로서 파악된다. 이것은 효용과 피해를 하나의 척도를 가지고 측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도 여전히 효용의 관점과 피해의 관점의 정량화가 문제시된다.

안전전문가들은 이러한 형식적-규범적 관점의 접근 방법을 통해 과학과 기술의 위험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발견했다고 믿었다. 그들은 위험을 확률과 피해의 규모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면 할수록 위험관리가 더욱더 용이할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원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다툼을 위험객관주의의 결정이론의 고찰방식이 무지의 해소를 통해 종식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보험학과 경제이론의 결정모델에서 차용한 위험 개념은 위험연구에서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Krüger, 1986). 학자들은 효용과 피해를 서로 상쇄시킬 수 있는 단일한 척도를 찾을 수 없었고, 그리고 고려되어야 했던 손실을 양적으로 규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 상이한 손실에 대한 기대를 동일한 위험척도로 환산한다는 것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자의적인 결정으로 이끌었다.

그밖에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재난은 원자로의 핵융합사고와 같이 경험적 사례의 부족으로 인해 확률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였다. 경험적 사례들이 충분한 만큼 주어지지 않은 경우 단지 주관적인 확률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 주관적 확률은 그때마다의 평가자들의 희망사항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Kuhbier, 1986). 이처럼 위험객관주의는 발생확률은 매우 낮지만 엄청난 규모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몰고 오는 재난

에 대해서는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다.

위험성 평가의 위기는 다음과 같은 2가지 통찰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위기관리학에는 공통된 위험 개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원전 등 새로운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엄청난 위험의 잠재성이 문제될 때는 보험학에서 빌려온 위험지표가 일상생활이나 정치여론에서 이해되지도 수용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Biswanger, 1990). 원전사고와 같이 위험 연구를 통해 위험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 선택되어 예견되었던 폭발사고에서조차 형식적인 위험 개념은 여론의 위험 평가를 완전히 빗나갔다. 그 결과 원전의 안전성과 원전사고의 비개연성을 증명해야 할 위험연구가 오히려 감내할 수 없는 원전의 위험을 밝히는 데 역이용되는 패러독스가 등장했다. 이것은 비록 피해가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지만 낮다하면 재난으로 이어지는 경우 통계적인 위험 계산은 신뢰를 잃는다는 의미이다. 공적인 논의에서는 위험객관주의의 한계가 금방 드러났다. 미국 쓰리마일섬 원자로사고와 체르노빌 원전폭발은 누구도 더 이상 산출된 확률의 숫자를 믿지 못하게 하였다. 그 결과 형식적 위험연구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과학적 객관성과 전문가의 능력은 불신을 받게 되었다.

### III. 위험주관주의(Risk-Subjectivism)의 가능성과 한계

위험주관주의는 이러한 위험객관주의의 불일치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위험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결정 행동을 연구대상으로 했다. 비록 위험 인지와 위험성 평가의 주관적인 구성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 결정이론이 준거모델로서 이용되었지만, 위험주관주의는 결정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의 확인에 관심이 있었으며, 인간이 특정한 위해 사건이나 주어진 상황조건에서 어떻게 위험을 경험하면서 평가하는지를 탐구했다. 이러한 위험을 ‘주관적’ 위험이라 하며, 심리학적-인지적 관점의 접근방법을 취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적 위험은 확률 계산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신뢰할만한 통계자료가 충분히 주어진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면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에 머물게 된다. 사실상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의 구분은 전문가와

일반인이라는 두 부류의 평가간의 차이로 수렴된다.

심리학적 위험연구는 위험 그 자체보다는 피해당사자인 개인(일반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들의 인지도와 평가와 관련된 요소들을 비교분석했고, 수용가능한 위험이 무엇인지를 탐구했다. 예컨대 자유의지에서 감수한 위험은 일반인에게 외부로부터 강요된 위험보다는 더 잘 수용된다. 전자에는 스스로 위험을 감내하는 자동차 운전의 위험과 독감, 흡연의 위험이 해당하지만, 후자에는 외부로부터 결정된 위험에 방치되는 원전의 건설과 운영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은 통제할 수 없는 위험보다 더 잘 수용된다는 명제가 있다. 비행기의 사고확률보다 자동차의 사고확률이 훨씬 더 높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통제능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비행기사고의 위험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비행기와 연관된 사고위험은 객관적(통계적)으로 훨씬 더 높은 위험인 자동차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인지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위험을 통제하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한 조사연구에서는 응답자의 97%가 자신이 망치, 칼, 면도기 등 일상용품에 의해 다칠 위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위험은 사회적-역사적 테스트를 거친 잘 알려진 기술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더 적게 수용된다. 광산채굴과 같이 익숙한 기술은 그렇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오래된 기술은 많은 사람이 장시간에 걸쳐 이용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가 시간적으로 지연되어 등장하는 위험은 피해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위험보다 더 잘 수용된다. 서서히 건강을 해치는 흡연이나 음주, 비만은 즉각적 위험인 자동차운전보다 덜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위험과 연결된 피해가 물적 피해처럼 잠정적으로 복구가능한 것이라면, 복구불가능한 피해가 문제될 때보다 위험이 더 쉽게 수용된다(Covello, 1983; Fritzsche, 1986).

이러한 위험비교 유형의 개발을 통해 앞으로는 개인적인 위험인지와 관련된 수용가능한 위험의 목록은 수없이 제시될 수 있다. 우리는 기존의 수용가능한 위험의 측면에다가 언제나 또 다른 측면을 덧붙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위험주관주의의 한계이다. 비록 이들 심리학적 위험연구의 개별 결과들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지만, 위험요소들이 많다는 것은 통일적인 위험척도를 만들려던

위험주관주의의 당초 구상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위험평가의 일반 모델의 구축에는 여전히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전체적으로 위험주관주의 연구는 피해의 규모, 특히 인적 피해의 규모는 심각하게 고려하는 반면에 발생확률은 무시해버리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보다 사회심리학적으로 지향된 위험연구는 모든 개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태도를 가진 일관된 이성체 격리는 기본가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확인하고, 나아가 기술적 위험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위험 태도를 파악하고 있다. 개인에게 닥친 과중한 자극인 위험상황에 대한 새로운 견해도 급작스러운 것이든 여러 가지 문제의 누적으로 인한 것이든 이성체계에 모순 없이 통합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Otway, 1980). 그 기본사고는 사람들이 원전과 같은 위험의 원천 그 자체를 인지의 준거로 삼아 이 위험의 원천에 대한 연상과 관념에 근거하여 비로소 특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을 귀납적으로 추론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태도의 형성에서도 개별적인 기술의 안전 측면에 대한 정보보다는 전체 기술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더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정방법을 원전에 대한 태도에 적용할 경우 흔히 잠재적 환경피해, 심리적/물리적 위험, 사회정책적 문제 및 경제적 효용성 등 상이한 위험요소 및 효용요소가 언급된다. 그로써 원전의 옹호자들이 특별히 경제적-기술적 효용을 강조한다면, 반대자들은 심리적 위험, 사회정책적 위험에 강조점을 둔다는 어긋나는 사실에 이른다.

다른 한편으로 위험에 대한 태도는 사회구조적인 귀속성과 밀접히 관련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자살, 자동차사고와 같은 개인적 위험은 계산된 위험 값과 통계 숫자를 비교하여 수용가능한 위험의 범위를 설정하면 되지만, 방사능오염과 같은 사회적 위험은 주민들이 인정하는 위험의 인지 정도에 따라서 수용가능한 위험의 범위가 다르게 결정된다. 특히 피해와 위해로서 표출되는 사건은 사회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의 인지에서 더 이상 위험 자체의 자연적 경과만을 고려할 수는 없으며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조직을 함께 산정해야 한다. 이러한 귀속성 문제는 점차 결정자와 당사자 간의 인지차이로 귀착되며,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저항까지 계

산에 넣어야 한다. 당사자 적격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위험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느껴지긴 하겠지만 효과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경험되어야 한다. 이러한 위험인지의 변형은 당사자 적격이 사회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주요 형식으로 평가되는 사회집단 혹은 계층 내에서의 소통적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예컨대 원전 논쟁에서는 나이, 교육, 직업이 기술에 대한 비판을 가능케 하는 특별한 태도 형성의 주요 요소로 언급된다. 기술 적 대적인 태도에 친화적인 집단은 대학생, 고위직 관료, 기업간부 등 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이면서, 18세에서 35세까지의 집단이고, 대체적으로 직접 생산직에서 일하지 않는 사회복지사, 하급직 관리, 하급직 간부 등으로 나타난다(Bechmann/Frederichs/Gloede, 1986).

#### IV. 위험구성주의(Risk-Constructivism)의 가능성과 한계

사회학적 연구는 위험주관주의와는 달리 위험의 수용 및 수용거부와 관련하여 개인의 주관적인 결정행위의 결과를 문제 삼기보다는 특정한 사회적 단위 내에서 어떤 요소에 근거하여 위험에 대한 특정한 견해가 지배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에 의해 견해가 극단적으로 갈리는지, 논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위험구성주의는 위험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와 태도를 밝히는 것을 넘어서 위험갈등의 서술이나 갈등 잠재력을 파악하는 데 기여했다. 양분된 견해와 사회구조적 요소 간의 상관관계는 갈등 잠재력을 사회구조와 관련하여 분석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시사적인 위험 문제, 즉 수많은 잠재적 위험 중에서 특정한 위험이 국가 위기관리의 대상으로 선택되고 위험으로 정의되는 현실에 접하여, 갈등 및 합의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사회구성주의가 위험객관주의나 위험주관주의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구성주의의 기본적인 연구과제는 위험에 대한 주민의 태도가 모든 가능한 견해의 균등한 분배가 아니며, 몇몇 소수의 침묵화된 위해 사건에서 생겨난다는 주장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새로운 생태학적-기술적 위험과 그 결과에 대한 인지와 태도는 여러 사회요소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오늘날 개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잠재적 위해와 위험은 개인

이 직접 경험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과학, 정치, 여론에 의해 매개되어 집단적으로 구성된다. 위험의 인지와 평가는 광범위하게 정보에 의해 매개되며, 정보가 표현되는 사회적 조건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Goodfield, 1983; Peltu, 1985; Sood/Stockdale/Rogers, 1987). 즉 특정한 위험과 효용이 정치 의제화되는 것은 사회적 소통의 결과인 것이다. 이점에서 위험구성주의는 고립된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하는 위험주관주의보다는 더 현실적이다.

무엇보다도 위험에 대한 개인의 인지와 태도를 구조화하는 위험의 선택에서 여론이 큰 역할을 한다. 경험적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여론은 개인의 견해를 변형시키는 한 인지적 기능을 하며, 사회적 기대가 개인에게 압력으로 작용하는 한 규범적 기능을 한다.<sup>3)</sup> 우리는 위험 문제에 대한 공적인 논의에 접해어야 비로소 놀라게 되고, 대부분의 문명화된 도시의 위험에 대해 알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지는 언론의 극화, 잘못된 정보 등에 의해 좌지우지되기도 한다. 비행기사고, 열차사고 등 언론에 의해 빈번히 극화되는 위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평균적으로 다른 영역보다 더 위험을 배태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만성적 천식, 다이어트 등에 의한 별로 극적이지 못한 사망사고는 흔히 낮게 평가된다. 또한 위험에 대한 인지가 정보의 시사적절성에 달려있다는 것은 위험의 인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저하게 동요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원전 및 핵폐기장 입지를 둘러싼 위험갈등에서 드러나듯이 특정한 위험이 여러 해에 걸쳐 사회문제로 쟁점화될 경우, 여론이 다양한 견해로 갈라지면서 사람들은 중립적 입장을 제외하곤 어떤 입장을 취하든 자신의 견해가 지배적인 여론에 부합한다고 느끼게 된다(노진철, 2004a). 이처럼 자신들이 지배적인 견해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고 여기는 집단은 감정적 측면이 인지적 측면을 압도하면서 때때로 격렬한 저항을 한다. 사실 여론의 정치화된 스펙트럼에서는 인지적 측면이 경미하게 평가된다(Gloede, 1987). 즉 원전을 둘러싼 위험갈등이 깊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의 원전에 대한 기술적 지식이 심화되지는 않는다.

3) 만일 개인이 일상 대화에서 그의 진술을 튀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자신의 진술을 일탈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자신의 관점을 많은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규범적 기대에서 진술하는 것이다(Rammstedt, 1981).

위험의 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이러한 여론과 사회구조적 입장 이외에, 사회에 기여하는 기술의 목적이 중요하다. 기술의 이용 목적은 고립된 것이 아니며 만족, 미래에 대한 전망, 안전 등 의미형성적인 가치 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결합되어 있다. 예컨대 윈트겐조사는 그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 및 효용을 고려하여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도 거의 거론되지 않는다. 석탄도 환경에 미치는 위험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동일한 사례이다.

이처럼 위험구성주의는 위험을 여러 사회요소로 인한 집단적인 구성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표출 형식은 사회 영역의 특별한 속성에 달려있다고 본다. 특히 문화이론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위험구성주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문화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위험에 대한 인지와 평가도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한다. 어떤 사회에서는 특정한 위험에는 주의를 보내지만 다른 위험에는 그렇지 않다는지, 그리고 위험의 주제화가 증가한다는지 하는 것은 그 사회 고유한 위험문화의 제도화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상적 삶이 안전해진 상황에서 오히려 자극적인 위험담론이 넘쳐나는 등 위험소통의 패러독스가 상대화되는 현상과, 위험문화의 변화가 위험에 대한 인지변화와 평가전환을 사회에 강요하는 현상이 설명된다.

문화이론적 위험연구는 제도적으로 문화된 사회영역을 집단(group)과 그리드(grid)로 표현되는 두 축을 따라 범주화한다(Douglas & Wildavsky, 1982; Döbert, 1994; Thompson, 1999). 집단은 사회집단의 외부경계와 그 사회적 환경에 대한 경계설정의 척도를 말하며, 그에 반하여 그리드는 개인의 행위를 상호 규제하는 집단 내의 모든 사회적 구분을 말한다. 그들은 이러한 배경에서 잠재적 위험과의 교류에서 각각 상이한 인지양식과 극복양식을 선택하는 네 가지 유형의 사회집단을 구분한다.

첫 번째의 위계적인 문화는 집단과 그리드 두 차원에서 모두 높은 가치를 갖는, 즉 외부에 대해서는 차이, 내부적으로는 통합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위계적 문화는 근본적으로 위험을 지배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규제 위주의 위기관리를 선호한다. 두 번

째의 개인주의적 시장문화는 집단과 그리드 두 차원에서 모두 낮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개인주의 문화는 위험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개인적인 행위역량의 범위에 따라 분류하고, 계산가능한 위험은 수용한다. 세 번째의 평등주의 문화(혹은 분파주의 문화)는 낮은 그리드 가치와 높은 집단 가치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평등주의 문화는 통상적으로 위험에 대한 높은 혐오감을 양성하고 위험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네 번째의 숙명론적인 문화는 높은 그리드 가치와 낮은 집단 가치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숙명론 문화는 위험을 외부나 다른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강요된 것으로 체험하고 수동적인 반응을 한다.

문화이론적 위험연구는 이러한 네 가지 기본구분의 비교를 통해 위험인지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도식화의 복잡한 과정을 밝혔으며, 각각의 위험문화에 사회구조적으로 주어진 위험의 도식화를 설명했다(Thompson, 1999). 또한 한 사회 내에서는 시장(기업가)과 국가(관료), 주변제도(시민단체), 하층민을 각각 네 가지 구분에 상응하는 사회제도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예컨대 국가와 시장에서는 발생빈도가 낮은 생태학적-기술적 위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증가한 것은 환경운동의 제도적 안정화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Douglas & Wildavsky, 1982: 122). 그에 따라 분파주의적인 환경운동의 제도적 안정화가 이윤의 최적화를 요구하는 개인주의적인 기업가의 시장과, 규제 위주의 위기관리 간의 지속적인 긴장 속에서 사회에 광범위한 인식의 변화와 평가전환을 강요한다는 사실을 밝혔다.<sup>4)</sup> 이처럼 문화이론적 위험연구가 문화비교적-역사적인 분석을 통해 위험에 대한 인지와 그 결과의 평가에서 상이한 위험문화의 확산을 확인한 것은 위험객관주의로는 파악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상은 그 기초하

4) 기업가는 생태학적-기술적 위험을 삶의 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대가로 간주하며, 잠재적인 위험과의 교류도 시민단체보다 덜 문제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그에 의한 잠재적 손해를 지배적인 사회구조가 변화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본다. 또한 기업가는 복잡하게 보이는 문제를 단순한 부분 문제들로 나누고 이들 부분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데 반하여, 시민단체는 기업편파적인 에너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안전 수준과 피해 수준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다고 항변한다(Douglas & Wildavsky, 1982: 165 이하).

고 있는 가정에서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위험 소통의 특수성과 역동성이 실제로 공리적으로 짜여진, 매우 일반적인 인류학적 지식에 기초한 증거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험 개념에서 위험에 대한 상이한 인지와 평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비교척도를 상정하지 않은 것은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Krohn & Krücken, 1993: 12). 왜냐하면 거의 모든 문화에는 인지된 위험과 실제하는 위험 간의 의미론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일 양자의 차이가 없다고 공언한다면 인지의 적절성과 평가의 자격에 대한 공적 담론의 기초가 흔들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문화로부터 독립된 절대적인 위험 개념을 고집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지와 현실 간의 의미론적 차이에 대한 완전한 포기도 역시 문제가 된다.

또한 위험구성주의는 그 논의를 좀 더 심화시킨다면 사회적 소통에서 지배적이 된 의제의 발생근거에 대한 해명문제에 부딪힌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관심을 끄는 것은 특정한 위험의 파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수용하는 것을 사회발전에 귀속시켜서 사회의 발전 정도를 진단하는 거시사회학적인 연구결과이다. 거시사회학은 과학 내에서는 기술에 대한 위험 평가와 수용이 개별적인 개인의 인지적 요소와 평가적 요소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용으로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사회의 미래상, 정치적 결정과정 및 제도에 대한 신뢰, 정보의 전달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정치적 가치에 달려있음을 밝히고 있다.

고전적인 안전연구에 반하여 태동했던 위험연구는 합리적인 위험산정, 왜곡되지 않는 위험인지, 그리고 올바른 위험결정을 위한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위험이 사회적 소통의 의제로 선택되고, 어떤 사회적 요소가 이 선택에서 역할을 했는지 등등 선택 문제에 귀착된다는 통찰에 이르렀다. 모든 위험 인지와 위험 결정이 맥락 의존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보편적인 위험척도에 대한 희망,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혹은 사회학적으로 위험의 우선순위를 논증할 수 있다는 희망도 포기된다. 이와 함께 인지로부터 독립된 위험객관주의도 인지의존적인 위험주관주의도 인지구성적인 위험구성주의도 위험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위험이론으로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사실 이들 위험연구의 한계는

공공연히 이론적인 심층논의를 피한 채 실용적인 문제해결에 곧바로 다가선 데 있었다.

## V. 위험사회학(Sociology of Risk)으로의 전환

위험사회학적 접근방법은 위험연구를 수용가능한 위험 수준에 지향되어 있던 이전의 협소한 지형의 합리성 지향적 위험 논의로부터 떼어내어 생태학적-기술적 위험상황을 현대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여 원칙적으로 우연적인 행위에 귀속시킴으로써 사회적 소통과 접촉시킨다. 이러한 위해에 대한 소통과 그에 따른 귀속과 관련되는 위험사회학은 Beck(1986; 1988)으로 대표되는 '위험사회'의 '재귀적 현대화' 이론과 Luhmann(1997)으로 대표되는 구성주의적 체계이론으로 대별된다.

Beck이 '사회적 구성'의 국면을 다양하게 인용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객관주의의 위해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반면에, Luhmann은 위험구성주의의 위해 개념을 외부환경에 대한 소통적인 귀속과 연관지어 개념적으로 명료하게 다듬는다. Beck은 기술투입의 증가에 따라 양적으로 늘어난 위험들, 즉 현대화의 통제 결핍의 관념을 가지고 위험 사례들을 병렬적으로 다루기만 할뿐 사회이론적 관점에서 사회문제로서 분석해내지 못한다. 그는 이들 생태학적-기술적 위험을 피해의 시공간적인 탈경계화(핵에너지, 유전공학), 인적·물적 피해의 팽창(석면, 비활 암모니아가스), 누적효과(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의 언급을 통해 객관적인 위해로 변형시킨다. 그 결과 Beck은 과학정책에서의 규범적인 우위를 생태학적 문제에 부여하긴 하지만(Beck, 1996), 그 재귀적 현대화의 귀속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더욱이 Beck은 '사회적 구성'의 국면을 다양하게 인용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객관주의의 위해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자연의 복수' 식의 "객관적인 적대권력으로서의 위해"(Beck, 1988: 19) 주장은 이미 과학기술사회학자들(Wynne, 1982; Mazur, 1983)이 '위험연구의 신화'라고 비판을 가했던 위험객관주의의 한계를 그대로 노정하는 것이다. 그 반면에 Luhmann은 위험과 위해의 차이를 이론적 논의의 준거점으로 삼아 위험객관주의와 위험주관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주관/객관 관계의 가설을 포기하

고 위험이론을 ‘생태학적 소통’(Luhmann, 1986)으로 급진화시킨다. 또한 문화이론적 위험연구가 위험을 문화상대적인 것으로 애매하게 규정했던 것과는 달리 위험을 결정에 환원시킴으로써 위험구성주의보다 더 급진적으로 관찰사건과 소통사건을 사회적 위험인자의 원천으로 규정한다. 즉 위험 개념은 결정의 부정적인 결과를 체계에 귀속시키는 사회적 잠재력과 관련된다.

Beck의 재귀적 현대화 이론은 한편으로 세계가 궁극적으로 과학에 의해서만 접근가능한 객관화할 수 있는 사태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이 세계가 유의미하게 구성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 반(半)-구성주의적 입장은 독립적으로 주어진 사태들(위해 혹은 위험)이 동시에 우연적인 구성활동인 귀속과 관련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렇다면 관찰자는 어떤 구성이 사태에 맞는지를 찾아내지만 하면 된다. 그러나 생태학적-기술적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찰이 과연 올바른 관찰인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 구성이 문제의 구성과 현실을 구분지을 수 있는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여기서는 과학이 된다(van den Daele, 1996: 422).

이처럼 생태학적-기술적 위해와 그 정치적 귀결에 대해 과학에게 경쟁 없는 관찰의 권위를 부여하는 접근방법은 다매락적인 관찰방법에 대조되는 입장도 아니다.<sup>5)</sup> 오히려 특이한 것은 반-구성주의가 취하는 외적인 관찰 위치가 여전히 위험소통의 내적인 조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반-구성주의는 위험에의 혐오(Beck, 1986) 혹은 유비무환(Wildavsky, 1989)과 같은 자기내부에서 생성된 고유한 가치가 위험소통을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외적인 관찰 위치로 인해 볼 수 없을 뿐이다. 특히 이러한 반-구성주의는 생태학적-기술적 위해/위험 사태의 구성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반-구성주의는 구성가능성, 주관적 평가 등을 인정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접근가능한 사태의 외부 세계를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에 기초해서는 유해한 결과가 확실하게 인정된 원인 혹은 불확실한 위해/위험의 복합체로 귀속되는 것이 권위 있는 지식과의 합리적인 교류냐 비합리적인 교류냐의 문제가 아니

라, 달리도 가능할 수 있는 우연한 결정을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없다.

또한 Beck의 ‘위험사회’ 시대구별은 맑시즘의 유산에서 기인하는, 생산양식에 기초한 자기파괴국과 연결된 자본주의 발전 동학의 이론적 약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Breuer, 1989; Brock, 1991; Schmid, 1991). 확실한 부의 분배 논리로부터 불확실한 위험의 분배 논리로의 이행이 결코 고립되어 파악될 수 있는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회영역에서 불확실성의 원칙을 관찰시키는 위험사회화의 구조가 이론적으로 충분히 분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 특히 생태학적-기술적 위해의 생산과 분배에 의해 지배되는 ‘위험사회’는 현대사회에서의 위해의 지속적인 증가를 단지 과학적-기술적인 현대화 과정에만 귀속시키는 한계를 가진다. 게다가 기술적으로 위험한 현대화 과정을 ‘위험사회’라는 현대사회의 특정한 국면으로 시대구별하는 것은 요아스가 지적한 것처럼 “연속성 단절의 과정”(Joas, 1988: 2)이다. 전통적 위험과 현대적 위험(‘산업사회의 위험’/‘위험사회의 위험’)의 구별은 파국의 잠재성, 결과의 비가역성, 피해의 지구화 등 생태학적-기술적 위험의 새로운 강조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이러한 제한적 규정으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위험소통을 포괄하는 사회이론의 구성에는 이르지 못한다.

Beck이 취하는 바와 같은 현실주의적 구상은 현존하는 지식의 조작과 관련하여 도덕적-규범적으로 확실한 시각을 선호한다. 그는 ‘위험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인간에 의해 다시 제거될 수 있다’(Beck, 1988)는 인본주의적 주장과 함께 위험문제를 위험한 기술의 선택포기 혹은 책임의식을 가진 정치적 규제를 통해 해결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변화를 ‘올바른 기술’의 결정문제와 지구적인 총체적 위기관리, 현재보다 더 나은 예방과 관료적 책임귀속의 강화에서 구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불확실성의 구조원칙에 비추어 너무 성급한 결론이다. 그 결과 Beck은 안전의 근원이던 과학과 기술이 위험의 근원으로 바뀌는 현대사회의 패러독스한 기초를 밝히지 못한 채 하부정치의 도덕적 열정에 의지한 사회적 위기의 극복을 주장하는데 그친다.

그에 비해 Perrow, Giddens, Luhmann은 위험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위험 문제에서 전체 현대

5) 다매락적 접근방법은 어떤 위험의 가능성이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주체화될 수 있도록 모든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사회의 기능체계들이 위험에 대한 높은 구성 압력을 받는 것으로 상정한다. 이런 입장이 잘 드러나는 의미론으로는 ‘자기 스스로 위협하는 사회’(Luhmann, 1986; Fuchs, 1992)가 있다.

성의 패러독스를 관찰한다. Perrow(1987)는 첨단기술의 영역에서는 절대적 안전이란 있을 수 없음을 조직의 측면에서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탁월한 연구를 보여줬다. Perrow의 분석에서 놀랄만한 것은 복잡한 기술의 경우 사고가 인간의 과실에 환원되기보다는 사고의 등장이 첨단기술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로써 가능한 장애는 체계적으로 조건지어진 것으로 관찰된다. 그에 따르면 현대기술은 더 이상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그 과정을 완전하게 기술하거나 그 경과를 광범위하게 기획할 수 없는 복합적인 체계이다. 복잡한 구조에 근거하여 항상 예견할 수 없는 작용과 과정,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것들이 예상외의 결정을 강요하고 그 결말은 불확실하게 된다.

Perrow는 위험을 복합적 상호작용을 하는 요소나 부품들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그 순서를 변경하기 어려운 기술체계나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의해 움직이므로 운영자가 변경할 여지가 적은 사회조직의 정상적인 속성으로 표현한다(Perrow, 1984). 작은 기계적 결합이나 부품 불량, 혹은 사소한 실수가 처음 설계할 때 기술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다른 부품과 하위체계에 영향을 주어 파국적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기술체계 및 사회조직에서는 오히려 사고가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상사고'의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어떤 통제이든 딜레마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복합적인 체계의 안전을 높이려고 시도하다보면 동시에 그 체계의 복잡성도 상승되어 장애가 일어나기 쉽고 통제도 할 수 없게 된다는 딜레마이다. 결국 현대 첨단기술세계를 사는 우리는 안전과 위험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 Giddens(1990)는 20세기에 등장한 복지국가를 열려진 미래에 대처하는 위기관리체제로 파악할 것을 주장한다. 그는 안전/위해, 신뢰/위험의 딜레마를 통해 현대성 발전의 부정적인 결과와 대면하는 현대의 자기준거성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현대사회의 고유한 위험의 윤곽을 양자의 요소를 조합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조정할 수 있지만 동시에 통제의 한계를 벗어나 재난으로 질주하는 '현대성의 이중성'을 지적한다. 위험은 개인적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 대중들에게 집합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 환경을 의미하며, 안전은 수용할만한

위험과 신뢰간의 균형에 의존한다. 세계화되고 있는 현대성의 사회체계들에서 기술적 지식에 대한 존중의 분위기, 즉 전문가체계에 대한 신뢰도 증가하지만 과학과 기술에 기초하여 다양한 위험이 증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핵전쟁, 원전사고, 생태학적 재난, 유전자조작식품, 인구폭발, 지구적 경제교역의 붕괴 등 위험환경이 제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개인적 위험과 집합적 위험을 여러 방식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가 우발적 사고에 대한 예방과 안전 보장을 명분으로 미래를 식민화하는데 이용된다는 것이다(Giddens, 1997: 195).

## VI. 체계이론적 발상: 위험과 위해의 차이

Luhmann은 위험담론의 증가를 현대사회가 미래를 다쳐올 가능한 피해의 회피라는 시각에서 주체화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지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인간의 개입, 즉 행위와 그 결정가능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위험으로의 전환'으로 표현한다. 그에 따르면 위험은 인간의 의도적인 시도의 대상이며 그에 따라 결정자에 귀속되는 데 반하여, 그 결정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자신의 통제밖에 있는 위해에 방치된다. 즉 위험은 기술투입의 증가와 같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인과적 관계가 아니라 사회 내적인 소통에 의해 환기된 사회적 결과인 것이다. 피해가 자연재해, 악의에 찬 공격 등 외부 환경에 의해 야기되었다면 위험이지만, 피해의 원인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무작위를 포함하여 자신의 이전의 행동에 귀속된다면 위험이라는 것이다(Luhmann, 1990: 661).

Luhmann에 따르면 사회에서 부딪히는 위험은 적절한 행위의 선택이나 중단 선택을 통해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해의 형태로서가 아니라 경제, 정치, 과학 등 개별적인 사회체계들의 위험에 대한 관찰의 형태로서 발생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를 위협하는 것은 사회 자신이며, 그것도 체계들의 상이한 위험관찰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Luhmann, 1986: 68). 이러한 맥락에서 Luhmann은 위험/안전으로부터 위험/위해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Beck이 '객관적인' 위험/안전의 구별에 기초하여 위험한 기술의 포기를 개연성

은 적지만 실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낙관적인 입장인데 반하여(Beck, 1986: 346), Luhmann은 위험의 인지뿐만 아니라 결정 선택의 포기도 사정에 따라서는 미래에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Luhmann, 1990: 134). 그는 위험한 결정의 선택과 행위 선택의 포기가 곧 안전의 획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위험소통의 패러독스를 들어서, 국가의 위기관리는 완전한 안전에의 도달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래에 위험방지가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정치적 허구라고 비판한다.<sup>6)</sup>

위험과 위해의 차이에 기초한 체계이론적 발상에서 중요한 것은 위험은 결정에서 생기며, 결정은 내려진 후에야 비로소 문제로서 보인다는 사실이다. 부정적으로 평가된 사건이 외부에서 야기된 것으로, 즉 환경에 귀속된다면 위험이 문제시 되겠지만, 손해의 발생을 자신의 결정의 결과로서, 즉 체계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만 우리는 위험에 대해 말한다. 다시 말해, 위험이 원인이 환경에 귀속되는 손해라면, 위험은 좁은 의미에서의 체계 자신의 결정에 귀속되는 부담인 것이다. 이러한 기본개념에 의지한 위험 논의는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위험은 더 이상 기술의 속성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행위 잠재력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위험과 위해의 차이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회적 사태가 반영된다.

첫째로 위험과 위해의 차이는 과거에 대한 역사적 차이를 Beck과 그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통적 위험/새로운 위험의 차이로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보다는 오늘날 기술적인 처리 능력이 확장되면서 점점 더 문명과 연계된 위험이 체계적으로 생산된 위험, 즉 결정에 귀속시켜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위험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여 세계는 우연적으로 되고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 이와 함께 질주하는 세계는 결정자의 계산 영역으로 옮겨진다. 위해의 위험으로의 전환 그 자체가 정당화되어야 하는 결정인 것이다.

둘째로 미래에 대한 관계가 변화한다.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결과를 환기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선취된 미래가 질주하는 현재를 규정한다. 왜냐하면 그

렇게 해야만 미래에 대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은 현재의 직접적인 물리적 위해와는 달리 미래에 일어날 사건과 관련되며 결정에 따른 손해를 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Luhmann, 1991). 결정이 비록 결정 이전에 존재했던 불확실성을 제거하더라도, 결정의 결과에는 잠재적으로 손해의 위험이 잔존한다. 미래는 다가오는 세대에게 더 이상 불투명한 것이 아니며, 현재 함께 고려하고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로 위험과 위해의 차이는 사회에서의 결정자와 당사자간의 갈등을 뚜렷하게 한다. 원전설비나 유전공학의 개활지실험은 결정자의 시각에서는 비용과 편익을 대비시켜 숙련된 과학적 규칙에 따라 계산된 위험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당사자의 시각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의 결과로서 생겨난 위해이다. 여기서 과학적-기술적 진보의 조정을 특징짓는 결정자와 당사자 간의 위험소통을 둘러싼 구조적 갈등이 시작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떤 과학적 탐구에도 불구하고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위험갈등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어떤 분명한 합리적인 결정기준이 없다. 따라서 옹호자이든 반대자이든 위험을 무릅쓰거나 조심해야할 충분한 이유는 있다.

Luhmann은 앞으로는 현재에서 내려진 결정이 점점 더 위험의 형태로 경험될 것으로 진단한다. 그는 위해의 직접적인 경험, 즉 재난 형태의 경험으로부터 결정의존적인 위험으로의 이행이 일어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증명을 시도한다(Luhmann, 1991: 52 이하). 그리고는 결정의 의사-진화적인 증가가 사회질서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 묻는다(Luhmann, 1990: 142 이하, 152 이하, 1991: 59 이하, 111 이하, 135 이하). 그에 따르면 위험 개념은 시간의 차이를 지시하기 때문에, 결정은 손해가 등장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게 평가된다. 왜냐하면 위험의 의미는 과거와 미래의 불연속을 통해 각인된 현대사회의 특징적인 시간 파악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미래는 비어있는 미결정의 상태로 체험되며, 그냥 단순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의 현재에서 구성된다.<sup>7)</sup>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더 자신이 처한 상태를 숙명적인 위해로서 해석하기보다는 결정의 결과로서 인식하는 경

6) Luhmann(1996)에 따르면, 보험의 체결은 생명이나 건강, 재화에 대한 더 많은 안전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경제에 귀속되는 새로운 위험을 생산한다.

7) 미래는 현재 만들어진 결정에 의해 출현한다. 그리고 미래의 손해는 출현할 수도 있고 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미래에 손해가 출현한다면 우리 스스로 혹은 다른 관찰자가 현재를 관찰하여 그 원인을 현재의 결정의 탓으로 돌릴 것이다.

향이 증가한다.

그렇게 해서 Gross(1994)의 지적처럼 생활을 계속해서 제한하고 가차 없이 내모는 성장명령과 제동불가능한 발전 역학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압축된 시간 안에서 과도한 가능성을 성취해야 하는 중압감에서, 결정의 과잉 산출이 오히려 사회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위험소통의 패러독스가 생겨난다. 한편으로 가능성과 현실성 간의 괴리를 가능한 한 줄여 극복하려는 사회의 조형능력에 대한 신뢰가 커지며,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는 진보 관념은 점증하는 미래의 선택 가능성을 기회로써 이해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거의 기회가 현재의 실질적인 조건 속에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혹은 자신이 선택되지 않은 상황에 빠지는 위험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가능한 미래의 손해에 대한 사회의 자기 보장성이 감소한다. 그 결과 현대사회에서는 진보담론으로부터 위험담론으로의 전환이 일어난다.

자연, 가치, 종교와 같은 초사회적인 제도도 사회 내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이해하는 성찰적인 현대사회에서는 Luhmann만이 언급했듯이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 압력이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각종 피해도 숙명적 위해로서 해석되기보다는 결정의 결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한다.<sup>8)</sup> 즉 불확실한 조건에서의 결정은 시대 의식의 각인된 양식에 속한다. 그러나 위험담론에서 본래 새로운 것은 위험의 자기준거성이다. 위험의 자기준거성은 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결정을 내리는 것만큼이나 똑같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득을 놓치든 손실을 입든 양자다 미래에나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Japp, 1992; Luhmann, 1991; Wildavsky, 1989).

사회이론적으로 지향된 위험연구는 이러한 패러독스를 고려하여 그 주된 이해관심을 더 이상 위험을 합리화하고 계산하고 정량화하는 데 두지 않는다. 과학화된 현대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이 바로 이 패러독스에 있다는 인식에서 상이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전개되는 패러독스를 다룬다. 이런 맥락에서 Krohn & Weyer(1990)는 과

학이 핵실험, 유전자복제 등 거대실험을 통해 그동안 과학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던 실험실 벽을 스스로 파괴한 이후 어떻게 과학 자체가 위험 원인으로 되는지를 탐구한다. Baecker(1989) 역시 위험과 합리성의 친화성, 그리고 그와 연관된 위험연구의 기준 상실에 대해 언급한다.

최근에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위험소통 연구(Plough/Krinsky, 1987; Jungermann et al., 1990)는 첨단기술의 위험 혹은 위해가 결정자와 당사자간의 상이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미래에 일어날 결과의 분석과 평가는 결정자의 맥락이나 당사자의 맥락이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는 현재에서 아직 알 수 없는 미래를 결정한다. 결정은 좋은 결과에 이를 수도 있고 나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지만 누구도 더 이상 더 나은 지식의 권위를 가질 수는 없다.

이처럼 최근의 위험연구는 그 지향점이 초기의 합리적으로 계산되고 측정될 수 있는 위험 관념으로부터 관찰의존적인 위험 관념으로 이행하고 있다. 결정자/당사자의 위험에 대한 시각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는 요청과 함께 위험객관주의와 위험주관주의로부터의 이반(離叛)이 일어난다. 위험을 단일한 시각에서 이해하던 틀에서 벗어나서 정부/시장/시민운동 혹은 중심/주변, 전문가/일반인의 시각분화가 사회학적 위험연구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와 함께 관찰자 위치의 탈위계화가 위험연구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 위험은 이제 더 이상 상황과 관련 없이 전제되는 위해로서가 아니라 위험사건에 대한 복합적인 소통의 결과로서 간주된다.

## VII. 맺음말

앞에서 살펴 본 서구의 위험연구가 가지는 한국적 함의는 우리 사회의 근대화의 특성을 위험의 관점에서 개념화하는 작업으로 구체화된다. 우선 사회질서를 안정화시키는 노력은 근대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박정희 정권 이후 국가가 각종 산업시설의 건설 및 기술혁신의 지원과 장려에 나섬에 따라 위로부터의 결정이 '압축적 근대화'를 이끌었다. 그 결과 국가는 과도한 성장 압력 속에서 거의 모든 사회 영역에 개입하여 위험성 높은 정책결정을 내렸다. 실질적인 조건과 가능성 간의 괴리가 너무 큰 상황에서 개입주의 국가는

8) 전통사회에서 살았던 농부는 자연재해를 천벌이나 불운의 결과로 받아들이며 신의 노여움을 두려워하거나 하늘의 무심함을 원망했지만, 오늘날의 농부는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재난관리를 소홀했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간주하고 국가에 대해 피해보상과 강화된 재난대책을 요구한다.

양자간의 격차를 계속해서 줄이기 위하여 자연이나 문화적 가치를 위반하는 무분별함에 빠졌다(노진철, 2004a). 국가는 시장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압축된 시간에 과도한 가능성을 성취해야 하는 중압감에서 '더욱 빠르게, 더욱 지속적으로, 더욱 많이'로 대표되는 발전국가의 명령에 복속하는 위험성 높은 결정들을 내렸다. 비록 어제는 불가능했던 것이라도 오늘 결정을 내리면 내일로 향하면서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압축적 근대화의 '하면 된다'는 신화가 삶의 템포를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에 따라 기술과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나 재정위기, 공공사업 위기, 정책실패, 대량실업, 경제불황, 산업재해, 환경오염, 기술적 재난 등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계층간 불평등, 지역불균형 발전, 교육위기, 가족해체, 노령화 등 사회적 위험도 체계적으로 생산되었다. 다시 말해, 결정의 과잉산출로 인하여 오히려 사회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가능성을 안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시민사회가 성장 일변도의 경직된 사회에 대항하여 국가 주도적인 압축적 근대화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이끌었다. 특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시민사회에서 자연재해, 생태학적-기술적 재난을 포함하여 각종 위협들이 인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생산된 위험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 연이어 터진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 부안 핵폐기장 입지거부사태, 황우석 교수의 인간유전자복제 등은 시민사회에서 위험소통을 활성화시켰다. 시민사회는 과거 압축적 근대화의 신화가 지배하던 시기에 내려진 결정이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생태학적-기술적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향으로 국가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 경제성장이 낳은 각종 위협에 대한 예방정책을 확립하게 된다. 이제 국가는 위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개입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과 각종 위기관리 의사결정기구의 설치에 의해 법적, 제도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자연재해, 기술적 재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위험연구의 뚜렷한 경향은 위험객관주의가 보여줬던 객관적인 위협에 대한 보고나 안전사회를 구현하려는 위기관리프로그램의 제시, 위험주관주의의 위협에 대한 주관적 판단의 비교에서 위협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을 강조하는 위험구성주의로의 전환을 거쳐, 결정자와 당사자 간의 위험갈등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를 심화시키고 경험적 영역에서 위험/위해의 구별을 검증해보는 것으로 이행하는 추세이다(Bonß, 1993; Bechmann, 1993; Vollmer, 1997; Bandelow, 2000). 이처럼 위험연구는 초기의 감정을 자극하던 극적 서술과 완전한 안전의 환상, 위험의 상대적 평가에 매료되었던 데서 벗어나 사회이론적으로 보다 엄밀한 개념구성과 심화된 문제제기로 나아가고 있다. Beck이 주장했던 전통적 위험/새로운 위험 간의 위험 주제화 방식의 역사적 차이보다는 현대 문명과 연결된 위해, 특히 기술적 처리능력의 확장과 연결된 위해가 점점 더 인간의 행위에 귀속되고 책임을 묻는 위험으로 고찰되는 페러다임의 전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위험연구는 위험구성주의가 위험 개념을 지나치게 문화상대적인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위험갈등을 간과했던 것과는 달리 위험소통을 둘러싼 결정자와 당사자 간의 갈등을 주시하는 추세이다.

위험/위해의 차이는 객관적인 물리적 위험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가능케 하며, 결정/무결정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안전의 허구적 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우선 위험/위해의 차이와 함께, 자연이 인간의 결정 행위가 초래할 부정적인 결과와 연계되고 이 부정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위협으로서 현시된다. 그렇게 해서 세계는 더 우연적으로 되고 결정에 더 의존적으로 되며, 그로써 결정자의 합리적인 산정 영역으로 더 강하게 이행한다. 위협에 고도로 민감해진 성찰적 사회에서는 과거 압축적 근대화의 시기에 내려진 결정이 미치는 피해, 재난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나아가 현재의 결정이 미래에 미칠지도 모르는 결과를 고려하면서 여전히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결정의 기초가 되는 과학적 지식은 사회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현재의 시점에서 그 결정의 타당성을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의 위험은 추후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지도 모르는 결정을 현재에서 내려야 하는 데 있다. 원전건설, 간척사업, 댐건설계획, 지역개발계획, 외화유출, 노조파업, 대학구조조정, 유전자재조합 농산물개발, 인간유전자복제 등은 후에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고 무시 못 할 만큼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일 수도 있다.

국가의 위기관리체계는 한편으로 각종 위험을 위험측정의 과학적 산정모델에 따라 포착하여 관리준칙에 따라 통제함으로써, 비록 완전한 안전의 목적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위험이 위협으로 변형되는 데 기여한다. 다른 한편으로 첨단기술의 발전과 이용이 국가의 정책프로그램과 제도화된 위기관리체계에 의해 계획되고 조정되면 될수록, 위험갈등이 일어날 잠재성은 더욱더 커진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결정의 부정적인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 적용, 확산 과정에서 위험이 자동적으로 정치 의제화되지는 않으며, 위험갈등은 생태학적-기술적 위험이 일반인에게 포착되어 사회문제로서 소통되는 한에서 일어난다. 에너지 공급체계의 원전예외의 의존 결정이, 혹은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개발과 생산의 확장 결정이, 인간배아줄기세포 복제의 허용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에 대한 일반인의 불안은 기술반대론자, 환경론자가 사회운동을 이끌어가는 동인이다.

위험은 두 가지 방식으로 기능적 분화와 관련된다. 하나는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은 전체 사회가 갖는 위험이 아니며, 그때마다의 사회체계로부터 자기준거적으로 인지된 혹은 생산된 위험이다. 소위 국가적 위기(혹은 총체적 위기)를 야기하는 위험은 정치의 고유한 관찰양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Beck의 '위험사회' 개념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정치체계의 단일한 관점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Fuchs, 1992: 135 이하). 다른 하나는 사회체계의 위험은 외부--다른 사회체계들이나 생태계--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외부로부터 야기된 정보가 체계 고유한 양가적 코드에 의해 자기준거적으로 처리되면서 잠재적 위험으로서 인식된 것이다. 예컨대 경제는 잠재적인 손해를 환경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지불/비지불, 편익/비용, 또한 정치는 정부(여)/하부정치(야), 과학은 참/거짓, 그리고 법은 합법/불법에 의해 결정의 결과로서 처리한다. 즉 위험의 처리는 각 체계가 고유한 정보처리를 통해 그 체계에 귀속시킨 위험과 교류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회체계도 전체 사회의 위험을 처리하는 데 우위를 점하지는 못한다. 위험의 처리 과정에는 대체로 여러 사회체계들이 참여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위험규제를 통한 국가의 위기관리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위험이든 환경운동과 대중매체에 의해 주제화되더라도, 정치만이 전체 사회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에 의해 포착되어 사회문제로서 정의되어야만 사회적 중요성을 획득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과학의 사회적 의의는 위험 혹은 위협을 그 자체로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예컨대 과학은 CO<sub>2</sub> 배출의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환경단체와 대중매체가 정치적 의제설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위험의 사회적 중요성은 물리적 위협에 대한 과학적 정의에 의해 바로 제기되지는 않으며, 정치적 결정 혹은 무결정의 공적인 귀속과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성립된다.

여기서 결정의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자와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당사자 간의 갈등이 현대사회의 특징적인 속성으로 윤곽을 드러낸다. 누군가가 피해의 원인자로 귀속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소통은 항상 위험/위해의 차이에 의해 일어난다. 만일 사건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위험이 아니라 감내하고 피할 수 있는 위험으로 소통된다면, 사건의 원인은 필연적으로 결정에 귀속된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위해에서 점점 더 사회적으로 생산된 위험으로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 위험은 사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피해의 가능성인 것이다. 위험소통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위험이 점점 더 많이 보이게 된다. 그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에 대한 요구도 점점 더 절박해지고, 동시에 결정자와 당사자 간의 위험갈등도 증가한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위험연구는 Beck이 재귀적 현대화의 이론틀 속에서 위험을 사회적, 정치적, 생태학적, 개인적 위험으로 자의적으로 유형화하고 지구화, 고용감소, 생태위기, 개인화를 끌어들이며 윤곽이 뚜렷하지 못한 '잡동사니모음(Schimank, 1990: 62)'으로 만든 것과는 달리, 보다 정치한 학문적 엄격성을 유지하면서 위험의 사회이론화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체계적인 위험생산에 대한 Luhmann의 지적은 일부 사회학자들이 하부정치에다가 문제해결의 규범적인 기대를 거는 것에 대해 경고를 발한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우리는 위험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위험과 위해 간에 선택은 할 수 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계산보다는 도덕적 논쟁을 선호하는

하부정치의 잠재력에 기대를 걸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던 결과를 얻기도 한다. 그러나 이 하부정치는 정치적 결정을 돕는 것일 뿐이다.

### <참고문헌>

- ▷ 노진철. 2004. 위험사회학: 위험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론화. *경제와사회*. 63: 98-123.
- ▷ 노진철. 2004a. '압축적 근대화'와 구조화된 위험: 대구지하철 재난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61: 208-231.
- ▷ 이재열·김동우. 2004. 이중적 위험사회의 구조: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를 중심으로 한 비교사례연구. *한국사회학*. 38집 3호: 143-176.
- ▷ 임현진 외. 2003. *한국사회의 위험과 안전*. 서울대 출판부.
- ▷ Baecker, Dirk. 1989. Rationalität oder Risiko, in M. Glagow, H. Willke, D. Wiesenral (Hrsg.). *Gesellschaftliche Steuerungs-rationalität und partikuläre Handlungsstrategie*. Pfaffenweiler: 31-54.
- ▷ Bandelow, Nils C. 2000. Systeme der Zulassung und Überwachung riskanter Techniken: Machtverlust diskursiver Verwaltung und Gegenstrategien, in: G. Simonis/R. Martinsen/T. Saretzki(Hrsg.). *Politik und Technik*. Wiesbaden: Westdeutscher Verlag. 302-318.
- ▷ Bechmann, Gotthard. 1993. Risiko als Schlüsselkategorie der Gesellschaftstheorie, in: ders.(Hrsg.). *Risiko und Gesellschaft: Grundlagen und Ergebnisse interdisziplinärer Risikoforschung*.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237-276.
- ▷ Bonß, Wolfgang. 1993. Ungewißheit als soziologisches Problem. in: *Mittelweg* 36. 1: 15-34.
- ▷ Brock, D. 1991. Die Risikogesellschaft und das Risiko soziologischer Zuspitzung. *Zeitschrift für Soziologie* 20: 12-24.
- ▷ Covello, V. T. 1983. The Perception of Technological Risks: A Literature Review.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23: 285-297.
- ▷ Fritzsche, A. F. 1986. *Wie sicher leben wir?* Köln.
- ▷ Fuchs, Peter. 1992. *Die Erreichbarkeit der Gesellschaft: Zur Konstruktion und Imagination gesellschaftlicher Einheit*. Frankfurt a.M.: Suhrkamp.
- ▷ Giddens, Anthony. 1990. *The Consequence of Modernity*. Stanford University Press(포스트모더니티. 이윤화·이현희 역. 민영사. 1990).
- ▷ Giddens, Anthony.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London: Polity Press(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현대의 자아와 사회. 권기돈 역. 새물결. 1997).
- ▷ Giddens, Anthony. 1998. *Runaway World: How Globalization is Reshaping our Lives*. Stanford University Press(질주하는 세계: 세계화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 박찬욱 역. 생각의나무. 2000).
- ▷ Gloede, F. 1987. Vom Technikfeind zum gespaltenen Ich. Thesen zur Technikakzeptanz, in: K. Lompe(Hrsg.). *Techniktheorie, Technikforschung, Technikgestaltung*. Opladen: 233-267.
- ▷ Goodfield, J. 1983. *Wissenschaft und Medien*. Basel.
- ▷ Gross, P. 1994. *Die Multioptionsgesellschaft*. Frankfurt a. M.: Suhrkamp.
- ▷ Japp, Klaus P. 1992. Mehr Sicherheit durch Technik? *Technik und Gesellschaft Jahrbuch* 6: 175-191.
- ▷ Joas, Hans. 1988. Das Risiko der Gegenwartsdiagnose. *Soziologische Revue* 11: 1-6.
- ▷ Jonas, H. 1984. *Das Prinzip Verantwortung*. Frankfurt a.M.(책 임의 원리: 기술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이진우 역. 서광사. 1994).
- ▷ Jungermann, et al.(Hrsg.). 1990. *Risiko-Konzepte, Risiko-Konflikte, Risiko-Kommunikation*. Forschungszentrum Jüri-ch.
- ▷ Klebelsberg, D. 1977. Das Modell der subjektiven und objektiven Sicherheit. *Schweizerische Zeitschrift für Psychologie* 36: 285-294.
- ▷ Krohn, Wolfgang-Georg Krücken. 1993. Risiko als Konstruktion und Wirklichkeit, in: ders. *Riskante Technologien: Reflexion und Regulation*. Frankfurt a.M., 9-44.
- ▷ Krohn, Wolfgang-Johannes Weyer. 1990. Gesellschaft als Labor. *Soziale Welt* 40: 349-373.
- ▷ Krüger, W. 1986. Risiken als Gegenstand der Sicherheitswissenschaft, in: P.C. Compes(Hrsg.). *Technische Risiken in der Industriegesellschaft*. Wuppertal: 299-316.
- ▷ Kuhbier, P. 1986. Vom nahezu sicheren Eintreten eines fast unmöglichen Ereignisses - oder warum wir Kernkraftwerkunfällen auch trotz ihrer geringen Wahrscheinlichkeit kaum entgehen werden. *Leviathan*: 606-614.
- ▷ Lau, Christoper. 1989. Risikodiskurse: Gesellschaftliche Auseinandersetzung um die Definition von Risiken. *Soziale Welt* 40: 418-436.
- ▷ Luhmann, Niklas. 1968. *Vertrauen: Ein Mechanismus der Reduktion sozialer Komplexität*. Stuttgart: Enke.
- ▷ Luhmann, Niklas. 1986. Die Welt als Wille ohne Vorstellung: Sicherheit und Risiko aus der Sicht der Sozialwissenschaften, in: *Die Politische Meinung* 31(229): 16-21.
- ▷ Luhmann, Niklas. 1990. Risiko und Gefahr. In *Soziologische Aufklärung* 5.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31-169.
- ▷ Luhmann, Niklas. 1991. *Soziologie des Risikos*. Berlin: de Gruyter.
- ▷ Luhmann, Niklas. 1993. Die Moral des Risikos und das Risiko

der Moral, in: G. Bechmann(Hrsg.). *Risiko und Gesellschaft: Grundlagen und Ergebnisse interdisziplinärer Risikoforschung*.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327-338.

- ▷ Luhmann, Niklas. 1996. Das Risiko der Versicherung gegen Gefahren. in: *Soziale Welt* 47.3: 273-283.
- ▷ Mazur, Allan. 1983. Gesellschaftliche und wissenschaftliche Ursachen der historischen Entwicklung der Risikoforschung, in: J. Conrad(Hrsg.). *Gesellschaft, Technik und Risikopolitik*. Berlin: Springer. 141-146.
- ▷ Otway, H.J. 1980. The Perception of Technological Risks: A Psychological Perspective, in: M. Dierkes et al.(ed.). *Technological Risk*. Königstein: 35-44.
- ▷ Peltu, M. 1985. The Role of Communication Media, in: H.J. Otway·M. Peltu(ed.). *Regulating Industrial Hazards and Public Protection*. London. 128-148.
- ▷ Perrow, Charles. 1984. *Normal Accidents: Living with High-Risk Technologies*. New York: Basic Books.
- ▷ Perrow, Charles. 1994. Accidents in High-Risk Systems. *Technology Studies*. 1: 1-20.
- ▷ Plough, A.-S. Krinsky. 1987. The Emergence of Risk Communication Studies –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Values* 12: 4-10.
- ▷ Rammstedt, Otthein. 1981. Politische Dimensionen des Akzeptanzproblems, in: Deutsche Gesellschaft für Forschung und Technologie e.V.(Hrsg.). *Zur Forschungs- und Technologiepolitik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 87-98.
- ▷ Schimank, Uwe. 1990. Dynamik wissenschaftlich technischer Innovation und Risikoreproduktion, in: J. Halfmann/K.-P. Japp(Hrsg.). *Risikante Entscheidungen und Katastrophenpotentiale: Elemente einer soziologischen Risikoforschung*.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62-91.
- ▷ Schmid, Th. 1991. Die Chancen der Risikogesellschaft, in: U. Beck(Hrsg.). *Politik in der Risikogesellschaft*, Frankfurt a.M. 216-224.
- ▷ Sood R.-G. Stockdale·E.M. Rogers. 1987. How the News Media Operate in Natural Disasters. *Communication* 37: 27-41.
- ▷ Vollmer, Hendrik. 1997. Zur Akzeptanzorientierung des Verwaltungshandelns in Risikokonflikten, in: P. Hiller/G. Krücken, *Risiko und Regulierung*, Frankfurt a.M.: Suhrkamp. 11-38..
- ▷ Wildavsky, Aaron/Mary Douglas. 1982. *Risk and Culture*. New York(환경위험과 문화. 김귀곤·김명진 역. 명보문화사. 1993).
- ▷ Wildavsky, Aaron. 1989. *Searching for Safety*. Oxford university Press.
- ▷ Wynne, Brian. 1982. Institutional Mythologies and Dual Societies in the Management of Risk, in: H.C. Kunreuther /E.V. Ley(ed.). *The Risk Analysis Controvers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Berlin: Springer. 127-143.

**盧鎮澈**: 1990년 독일 빌레펠트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논문: Ökologische Problematik und gesellschaftliche Anpassung, Aus der Sicht der Theorie selbstreferentieller Systeme), 현재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환경사회학회 부회장, 한국사회학회 한국NGO학회 이사, <사회와이론> 편집위원장, 대구경북환경연구소 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개입주의 국가의 강화: 압축적 근대화의 신호로부터 위험사회의 성찰로”, “위험시설입지 정책결정과 위험갈등: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을 중심으로”, “시민적 성찰과정과 대구지역 시민사회의 형성: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을 중심으로” 등이 있으며, 관심분야는 환경문제, 위험사회, 정보사회이다. (jcrho@knu.ac.kr)